

민사소송법

2012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甲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단, 다음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서로 무관하다) (총 50점)

- 1) 제1심 판결선고 후 乙이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법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甲이 받은 판결의 효력을 논하시오. (10점)
- 2) 제1심 판결선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이 소장에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乙이 소장부분, 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소송법상 구제수단을 논하시오. (20점)
- 3) 위 본문의 사례에서 만약 甲이 주위적 청구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하시오. (20점)

제 2 문. 甲은 乙을 상대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여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3,000만원을 인정하면서도 2,000만원은 이미 변제하였기 때문에 1,000만원 이외의 대여금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입증방법으로 乙 명의로 작성되고 乙의 인장이 날인된 변제영수증을 제출하였고, 乙은 그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2회 변론기일이 열리자 乙은 위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위 영수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25점)

제 3 문. 甲을 포함한 48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수소법원은 변론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면서 새 기일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새 기일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甲이 출석하자, 수소법원은 즉시 소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소각하결정은 타당한가? (25점)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